



남북한 화폐 통합에 관한 연구

장원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서론

남북한 경제 협력과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간의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구동서독 통합처럼 흡수 통합이 될 수도 있고, EC 통합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혼란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본고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한 경제 통합의 일환으로 화폐 통합시 적용될 적정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여, 적정 교환 비율 결정 모형을 연구하려고 한다.

구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제·화폐 통합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기업, 주민들의 이해 관계를 반영

본고는 유량(flow) 개념과 저장(stock)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극소화하는 교환 비율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환 비율 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을 토대로 한 남북한 화폐 통합시 바람직한 교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량과 저장을 분리시키는 방안으로서, 남북한 화폐 통합시 유량 변수인 임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임금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65,708 원이 적당할 것이다. 반면, 예금·부채와 같은 저장 변수는 보다 낮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화폐 통합을 한 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한에서의 인플레이션 방지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37 원이 적당할 것이다.

둘째, 화폐 통합 방식에 따라 교환 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으로서 단계적·점진적인 통합의 경우, 구조 적응에의 압력 완화, 북한 제품에 유리한 구매력 발전, 환율을 통해 북한내 가격 구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방지, 점진적인 적응 과정으로 대량 실업 사태 방지를 위해 무역 환율로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무역 환율이 지금은 왜곡되어 있지만 남북 통일시의 무역 환율이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즉각적인 화폐 통합의 경우, 가격 개혁의 즉각적인 단행, 준비 과정없는 세계 시장과 경쟁 상태에의 돌입으로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와해와 대량 실업의 발생, 또한 기업들의 도산 우려, 북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때문에 노동의 평균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여 가장 최적인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남북한 화폐 통합시 적용될 적정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넓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넓게는 유량(flow) 개념을 이용한 교환 비율 결정 모형과 저장(stock) 개념을 이용한 교환 비율 결정 모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소비자 불가지수를 이용하여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을 산정하거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응용한 통화 구매력 평가 모형을 통하여 교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둘째, 단위 비용 평가를 통해 교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위 비용 평가는 임금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교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수출입 물가지수를 응용하여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 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저장(stock) 변수인 통화량을 이용하여 적정 교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량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과 저장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남북한 경제·화폐 통합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환 비

율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환 비율 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환 비율 결정에 관한 新고전학파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과 이국 모형에 의한 교환 비율

- 변동 환율하 통화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교환 비율

$$E = \frac{M^S / M^{SN}}{k^S Y^S / k^N Y^N} = \frac{\text{남한화 133.178조 원} / \text{북한화 123억 원}}{0.099 \times 3,769 \text{억 달러} / 0.099 \times 184 \text{억 } 3,840 \text{만 달러}} = 529.782$$

즉, 남북한 화폐 통합시에 북한화 : 남한화 = 1 : 529.782로 교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이국 모형(two-country model)에 의한 교환 비율의 결정¹⁾

남북한 화폐 통합시에 유통되는 남북한 통화량을 M, N이라 하자.

1) Robert E. Lucas Jr, "Interest Rates and Currency Prices in a Two-country World", *JNE*, 1982, pp. 335~359의 내용을 남북한 화폐 통합에 응용한 것이다.

$$e \left(\frac{\text{남한원}}{\text{북한원}} \right) = \frac{M}{N} \cdot \frac{\eta}{\xi} \cdot Py$$

$$= \frac{\text{남한 통화량}}{\text{북한 통화량}} \cdot \frac{\text{북한 GNP}}{\text{남한 GNP}}$$

$$e = \frac{M}{N} \cdot \frac{\eta}{\xi} \cdot Py$$

$$= \frac{\text{남한화 1,331,787억 원}}{\text{북한화 123억 원}} \cdot \frac{184\text{억 3,840만 달러}^2}{3,769\text{억 달러}}$$

$$= 529.782$$

즉, 북한화 : 남한화 = 1 : 529.782 이다.

○ 적용 가능성

이 모형은 교환 비율 결정의 이론적 모형으로 2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변동 환율하 2국의 통화론적 접근 모형이고, 또 하나는 이국 모형에 의한 교환 비율 결정 모형으로 이는 Lucas의 이국 모형(two-country model)을 남북한에 적용한 것이다. 전자는 남북한이 완전 고용 상태이며 물가가 신축적인 - 고전학파가 상정한 - 경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 결정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남북한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환율을 결정하고 있는데, 실제 통일 시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한다는 생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실제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실체로 인정해야 바람직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 상황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이론을 전개한 이국 모형에 의한 교환 비율 결정 모형은 남북한 화폐 통합시에 고려해볼 만한 교환 비율 결정 모형으로서, 그 교환 비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화 : 남한화 = 1 : 529.782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

○ 소비자 물가지수의 측정 방법³⁾

$$LPI = \frac{\sum_{i=1}^n p_{it} q_{i0}}{\sum_{i=1}^n p_{i0} q_{i0}} \times 100 = \frac{\sum_{i=1}^n p_{it} \left(\frac{p_{i0}}{p_{i0}} \right) q_{i0}}{\sum_{i=1}^n p_{i0} q_{i0}} \times 100$$

$$= \frac{\sum_{i=1}^n p_{i0} q_{i0} \left(\frac{p_{it}}{p_{i0}} \right)}{\sum_{i=1}^n p_{i0} q_{i0}} \times 100$$

$$= \sum_{i=1}^n \left(\frac{p_{i0} q_{i0}}{\sum_{i=1}^n p_{i0} q_{i0}} \right) \left(\frac{p_{it}}{p_{i0}} \right) \times 100 \quad (2-1)$$

○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

$$PPP = \frac{PI^S}{PI^N} \cdot R_0 \quad (2-2)$$

PPP: 구매력 평가 환율

2) 북한 통화량은 남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교환 비율 결정에서 123억으로 추정된다.

3) 김대식의 2인, 「현대경제학원론」, 1994, pp. 528~533.

PI^S: 남한의 물가지수
 PI^N: 북한의 물가지수
 R₀: 기준 환율

1) 1984년, 1991년 북한 공정 가격을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

① 1975년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 가중치 부여

$$PPP = \frac{PI^S}{PI^N} \cdot R_0 = \frac{1.395058}{1.487864} \times 341.356 = 320.064 \text{이다.}$$

즉, 북한화 : 남한화 = 1 : 320.064이다.

② 남한과 북한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

$$PPP = \frac{PI^S}{PI^N} \cdot R_0 = \frac{1.395058}{1.511041} \times 341.356 = 315.155 \text{이다.}$$

2) 1984년, 1991년의 암시장 가격

① 1975년 남한 기준으로 북한 가중치 부여

$$PPP = \frac{PI^S}{PI^N} \cdot R_0 = \frac{1.526098}{1.316444} \times 341.356 = 395.720 \text{이다.}$$

즉, 북한화 : 남한화 = 1 : 395.720이다.

② 남한과 북한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

$$PPP = \frac{PI^S}{PI^N} \cdot R_0 = \frac{1.526098}{1.316287} \times 341.356 = 395.767 \text{이다.}$$

○ 일정 시점 (1991년)에서 준거 상품과 용역 바스켓을 이용한 남북한 통화 구매력 교환 비율

1) 상품 가격 자료

2) 분석 기법

$$E_{S/N} = \frac{P^S}{P^N} \quad (2-3)$$

E_{S/N}: 남한 통화로 표시한 북한 통화의 가격(북한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남한 통화의 量)

P^S: 준거 상품과 용역 바스켓(reference commodity basket)의 남한 화폐 가치 평가액

P^N: 동일한 상품과 용역 바스켓을 사기 위한 북한 화폐 가치 평가액

3) 1990년 공정 가격의 통화 구매력 교환 비율

① 1975년 남한 기준으로 북한 가중치 부여

$$E_{S/N} = \frac{P^S}{P^N} = \frac{19,553.87}{20,047.87} \times 341.356 = 332.945 \text{로 계산된다.}$$

② 남한과 북한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

$$E_{S/N} = \frac{P^S}{P^N} = \frac{19,553.87}{21,813.80} \times 341.356 = 305.991 \text{로 계산된다.}$$

즉, 북한화 : 남한화 = 1 : 305.991이다.

단위 비용 평가를 통한 교환 비율

○ 적용 가능성

소비자 불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은 북한 주민의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 비율이다. 남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을 적정 환율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면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실질 구매력이 저하된다. 지금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인당 GNP의 1/1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적정 교환 비율 이하로 교환 비율이 책정되어 북한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 수준이 저하되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남한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교환 비율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동서독의 경우에는 실질 구매력 수준 이 상인 1 : 1 교환 비율로 화폐 통합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에서 구서독으로 노동의 대량 유입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폐 통합으로 혼란을 막고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 비율은 이 모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 다.

○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모형

$$P^S = \frac{W^S}{MP_L^S} \quad (2-4)$$

$$P^N = \frac{W^N}{MP_L^N} \quad (2-5)$$

$$E = \frac{P^S}{P^N} \quad (2-6)$$

(2-4)식, (2-5)식, (2-6)식을 정리하면

$$E = \frac{W^S}{W^N} \cdot \frac{MP_L^N}{MP_L^S} \quad (2-7)$$

1) 추정 모형

북한의 생산 함수는 노동 생산성 추정에 편 리한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 함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t = L_t^\alpha K_t^{1-\alpha} \quad (2-8)$$

Y : 북한 GNP

L : 노동의 양

K : 자본의 양

α : 산출량의 노동 탄력성

t : t기

(2-8)식의 양변을 L로 나누면

$$\frac{Y_t}{L_t} = L_t^{\alpha-1} K_t^{1-\alpha} \quad (2-9)$$

를 얻게 된다.

좌변의 $\frac{Y_t}{L_t}$ 는 북한 GNP를 노동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t기의 평균 노동 생산성이 된다. 평균 노동 생산성은 남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를 함에 있어서 먼저, 북한의 노동 한계 생산성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8)식, (2-9)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2-8)식을 노동(L)에 대해 미분하면

$$\frac{dY_t}{dL_t} = \alpha L_t^{\alpha-1} K_t^{1-\alpha} = \alpha \cdot \frac{Y_t}{L_t} \quad (2-10)$$

을 얻게 된다. (2-10)식으로부터 t기의 한계 노동 생산성은 노동 탄력성(α)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곱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α 값의 추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10)식을 추정하여 α 값을 알고자 한다. 추정을 위해 (2-10)식에 Log를 취하면

$$\ln\left(\frac{Y_t}{L_t}\right) = (\alpha-1)\ln L_t + (1-\alpha)\ln K_t \quad (2-11)$$

(2-11)식 우변의 노동과 자본의 계수는 노동과 자본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노동 탄력성(α)과 평균 노동 생산성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노동 탄력성(α)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즉, 앞에서 구한 α 와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구할 수 있다.

2) 자료

- ① 북한 GNP
- ② 노동
- ③ 자본

3) 북한의 노동 생산성

북한의 노동 생산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하나는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다.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2-11)식인

$$\ln\left(\frac{Y_t}{L_t}\right) = (\alpha-1)\ln L_t + (1-\alpha)\ln K_t$$

에서 노동의 평균 생산성(NAP)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NMP)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때, 북한의 GNP(Y_t)와 북한의 경제 활동 인구 내지 취업자(L_t)는 황의각 자료와 통일원 발표를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지만, 북한의 자본(K_t)는 쉽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조동호는 북한의 예산 지출에서 인민 경제비의 기본 건설 투자 자금을 투자로 보고 추정한 결과와 다른 방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조동호(1993)가 추정한 자본량을 이용하여 (2-10)식의 α 를 추정한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노동 탄력성(α)인

0.52에 평균 노동 생산성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노동 탄력성(α)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α 와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하여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다.

4) 남한의 한계 노동 생산성

북한의 노동 생산성 추정 방법과 같은 절차를 통해 노동 탄력성을 구한 다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산출량의 노동 탄력성($\alpha=0.77$)×노동의 평균 생산성으로 구할 수 있다.

5) 분석 결과

$$E = \frac{W^S}{W^N} \cdot \frac{MP_L^N}{MP_L^S} = \frac{430,000}{130} \cdot \frac{1,137.98}{10,744.48} = 350.327$$

○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모형

1) 모형과 실증 분석 결과

$$E = \frac{\frac{W^S L^S}{Y^S}}{\frac{W^N L^N}{Y^N}} = \left(\frac{W^S}{W^N}\right) \left(\frac{L^S}{L^N}\right) \left(\frac{Y^S}{Y^N}\right) = \frac{W^S}{W^N} \cdot \frac{AP_L^N}{AP_L^S} \tag{2-12}$$

$$E = \frac{W^S}{W^N} \cdot \frac{AP_L^N}{AP_L^S} = \frac{430,000}{130} \cdot \frac{2,162.95}{13,922.75} = 513.862$$

○ 적용 가능성

남북한 화폐 통합으로 남한은 통합에 따른 수요 증대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경제·화폐 통합에 따른 국영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도산과 대량의 실업⁴⁾이 발생할 것이며, 남한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발생할 것이다. 남한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도산과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과잉 고용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고용 구조로 볼 때 통합 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실제 구 동서독의 경제·화폐 통합시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북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교환 비율을 결정할 때는 이 모형이 적합할 것이다.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

○ 序

本節에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가격 결정 방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 가격지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남한과는 최대 교

4) 사회주의 국가의 실업률을 보면 구소련 17%, 폴란드 18.6%, 구동독 14.6%, 체코슬로바키아 19%, 헝가리 24.9%, 루마니아 25.7%, 불가리아 27.4%, 중국 7.7%, 북한 12.6%로 나타나 있다.

역국이기도 하면서 북한과의 교역 규모도 전체 교역 규모의 10%를 능가하는 일본을 기준으로 하여 남한과 일본, 북한과 일본간의 무역총액을 사용하여 가격지수를 구해보기로 하였다.

○ 조사 결과

$$\frac{PI_{86}^S}{PI_{86}^N} = \frac{1984\text{년 남한의 대미 환율}}{1984\text{년 북한의 대미 환율}}$$

PI_{86}^S : 남한의 1986년 일본 기준 수출입 물가지수

PI_{86}^N : 북한의 1986년 일본 기준 수출입 물가지수

$$\text{여기서 } PI_{86}^S = \frac{\sum_{i=1}^n p_{86}^i q_{86}^i}{\sum_{i=1}^n p_{81}^i q_{84}^i} \text{ 로 } PI_{86}^N \text{ 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나타내기로 한다(단, p : 일본과의 거래 가격, q : 일본과의 거래량).

결국, 주어진 상품 바스켓 내에서의 거래총액을 가지고 수출입 물가지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자료상 북한과 일본과의 거래액은 π 으로 나타내져 있으므로 이를 달러 단위로 고쳐주기 위해 분자와 분모를 각각 해당 연도의 일본의 대미 환율로 나누어주기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한) 1984년의 상품 바스켓 교역 총액:

10,110,000,000 달러

1986년의 상품 바스켓 교역 총액:

13,895,000,000 달러

$$PI_{86}^S = \frac{13,895}{10,110} \approx 1,374$$

(북한) 1984년의 상품 바스켓 교역 총액:

53,681,491,000 달러

1986년의 상품 바스켓 교역 총액:

33,027,576,000 달러

달러로 환산하면

1984년: 53,681,491,000 달러 ÷
251.10 ≈ 213,785,308.6
달러

1986년: 33,027,576,000 달러 ÷
159.10 ≈ 207,590,044
달러

$$PI_{86}^N = \frac{207,590,044}{213,785,308.6} \approx 0.971$$

따라서, $\frac{PI_{86}^S}{PI_{86}^N} \approx 1.415$ 이다.

1984년 남한의 대미 환율은 827.40 원/달러이고, 북한의 대미 환율은 통일원 자료에 의하여 2.36 북한원/달러이므로

$$\frac{1984\text{년 남한의 대미 환율}}{1984\text{년 북한의 대미 환율}} (\text{기준 환율}) = 350.593 \text{이 된다.}$$

결과적으로,

$$\begin{aligned} \frac{PI_{86}^S}{PI_{86}^N} \times \text{기준 연도 환율} &= 1.415 \times 350.593 \\ &\approx 496.089 \end{aligned}$$

즉, 비교 연도인 1986년 남한의 북한에 대한 환율은 북한화 1원당 남한화 496,089 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적용 가능성

해외 부문에서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와 단절된 상태였고 동구 공산 국가의 몰락으로 인해 해외 시장과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과 무역 거래가 많았던 구소련인 러시아와 중국도 각기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더 해외 시장과 단절된 상태이다. 현재는 구상무역체계(Barter System)로 남북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수출의 대부분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 가격에 아닌 동유럽 국가들과의 쌍방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품질 개선이나 기술 혁신, 원가 절감 등의 노력없이도 교역이 가능했다.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면 급작스럽게 해외 시장이 개방될 것이고,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나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도 대폭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적정 교환 비율 이상으로 교환 비율이 결정되면 북한 재화의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그에 따라 국제 교역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입 경쟁력을 반영하는 교환 비율은 이 모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외적 요인을 고려한 교환 비율

남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교환 비율 결정

○ 남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환 비율

1) 북한 통화량 추정

① 북한 통화 유통 속도의 추정

사회주의 국가의 유통 속도에 관한 내용이 IMF World Bank에 나오는데, 동구권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8년 M_2 의 유통 속도를 보면 헝가리는 2.3, 폴란드는 1.6, 체코슬로바키아는 1.5, 불가리아는 1.0, 루마니아는 2.3이었다. 이 5 개국의 유통 속도의 평균은 1.74로서 북한의 유통 속도도 사회주의 유통 속도의 평균치인 1.74라고 가정한다.⁵⁾

② 북한 통화량 추정

i) 북한의 명목 GNP 추정

북한의 명목 GNP는 한국은행, 통일원 등

5) Gerard Caprio, David Flokerts-Landau, and Timothy D. Lane, *Buliding Sound Finance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World Bank, 1994, p. 283.

여러 기관과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상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유사하고 또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황의각 북한 GNP 추정치를 사용한다.⁶⁾

ii) 북한 통화량 추정

다음은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인 $MV = PY$ 를 이용하여 북한의 통화량을 추정한다. 먼저 북한의 통화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황의각이 추정한 1994년 명목 GNP(PY)를 이용한다. 황의각 자료에 의하면 1994년 북한의 명목 GNP는 18,438.4 달러(북한화 433.3억 원)이다

그리고 유통 속도(V)는 사회주의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유통 속도 평균값을 북한의 유통 속도라고 가정하거나, 현재 북한의 명목 GNP 수준이 남한의 1974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1974년의 유통 속도를 북한의 유통 속도라고 가정한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유통 속도의 평균값은 1.74이므로 북한의 통화량(M_2)는 북한화 249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는 현재 북한 명목 GNP 수준과 유사한 남한의

1974년 유통 속도 3.524를 가정하면 북한의 통화량(M_2)는 북한화 123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소련의 경우, M_2 의 GDP 점유율이 1881년의 경우 61.2%, 1989년 65.5%, 1990년 72.5%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경우 M_2 의 GNP 점유율과 비슷하다.⁷⁾

2) 스톡 개념을 이용한 교환 비율 결정⁸⁾

화폐 통합 후 북한의 화폐 유통 속도는 남한의 화폐 유통 속도와 동일하고, 북한의 GNP 수준이 남한 GNP의 1/20이라고 추정하므로 북한의 적정 통화량은 남한 통화량의 1/20이 될 것이다.⁹⁾ 이때 남한 원화와 북한 원화간의 적정 교환 비율은 북한의 적정 통화량과 북한의 실제 통화량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6) 황의각, 「북한경제론: 남북한 경제 현황과 비교」, 도서출판 나남, 1992.

7) 박세훈, 「소련의 대외 무역 및 금융체도의 변혁」, 1991, p. 70.

8) Bofinger, Peter, "The German Monetary Unification: Converting Marks to D-Mark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1990, pp. 55~75. 이런 방식에 의해 적정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을 'Capacity oriented Monetary Approach' 라 한다.

9) 적정 통화량은 북한 경제력 규모로 화폐 수요량을 추정함으로써 구할 수도 있다. 즉, 북한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화폐 수요량인데 균형 상태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적정 화폐 수요량이 곧 적정 화폐 공급량(적정 통화량)이 되는 것이다.

〈표〉 적정 교환 비율 산정(1994년 말 기준)

남한 통화량(M2) (남한화 10억 원)	추정된 북한 유통 속도	북한 통화량 (북한화 10억 원)	적정 북한 통화량 (남한화 10억 원)	적정 교환 비율
133,178.7	사회주의 평균 유통 속도 1.74	24.9	6,659	267.430:1
	남한의 1974년 유통 속도 3.524	12.3	6,659	541.377:1

I. Fisher의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 $MV = PY$ 를 변형하면 $V = \frac{PY}{M}$ 가 유도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명목 GNP와 통화량을 Y_N, M_N 으로 놓고 남한의 GNP와 통화량을 Y_S, M_S 라 하면 $Y_S M_N = M_S Y_N$ 이 성립된다. 1994년 말 현재 북한의 적정 통화량이 66,589억 북한원이라고 추정되었으므로 남북한의 적정 교환 비율은 북한화 : 남한화 = 1 : 267.430 혹은 북한화 : 남한화 = 1 : 541.377이다. 즉, 북한화 1원당 남한화 267.430 원 또는 541.377 원이다.¹⁰⁾

3) 적용 가능성

남북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진 후 북한에서는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잠재된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나타나는 북한 주민들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의 노후화된 산업 시설의 개선을 위한 거대 규모의

신규 투자 등으로 인해 자본재의 수요 증가가 있게 된다. 또, 일시적으로 실물 공급과 화폐의 자산적 가치가 보장됨을 느낀 후부터는 절약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 즉,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면서 북한 주민의 소비 성향이 생필품에서 질이 좋은 생필품이나 사치재, 내구소비재로 전환되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한편,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낙후된 사회간접시설과 생산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하튼, 남북한 화폐 통합 후 북한은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남한은 전반적인 총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즉, 남한은 화폐 통합 후 북한 지역의 소비와 투자 수요 증가, 그리고 북한 기업의 도산과 대량의 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불황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남한 지

10) 배영진, 「동서독의 가격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991, p. 124.

역에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 지역은 화폐 통합에 따른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가격체계의 변화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즉, 북한은 의식주에 필요한 소비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보조금이 철폐되고, 시장가격체제가 되면 지금까지 잠재해왔던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화될 것이다.

화폐 교환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는 화폐 통합 후 남한원화로 표시되는 북한의 실제 통화량이 북한에서 남한 수준의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북한의 적정 화폐량을 어느 정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이 적정 교환 비율을 초과하는 교환 비율로 결정되면, 화폐 통합에 따른 통화 공급의 증가로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화폐 통합 후 적정 교환 비율을 초과하는 교환 비율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북한 주민들이 기존 예금을 채권, 주식, 장기 적금 등 이자율이 높은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이 높은 율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만약, 화폐 통합 후 정책 결정자가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둔다면, 저량 변수인 통화량을 이용한 적정 교환 비율 모형에 입각하여 결정된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77 원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지 않고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때, 적정 교환 비율을 초과하는 교환 비율시에는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지만 북한 지역의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한 통일채와 같은 장기 국채의 발행이나 북한 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주식의 매각과 같은 방법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 때에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교환 비율을 결정하지 않아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 통일 비용을 고려한 교환 비율

기관 또는 학자별 통일 비용 추정치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 북한 통일 비용을 추정한 국내외 각 기관 또는 학자들은 대체로 통일 정부가 약 5~10 년간에 걸쳐 북한 지역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1인당 소득 수준을 남한의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 황의각 등 10여 개의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학자가 추정한 통일 비용의 규모는 최저 400억 달러(32조 원)에서 최고 1조 8,000억 달러(1,440조 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 기관 또는 학자에 따라 통일 비용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통일 비용의 개념 차이 즉, 통일 비용을 정부의 재정 부담액에 국한할 것인가

가 아니면 민간 부담액을 포함시킬 것인가, 북한 지역의 소득 수준을 남한의 몇 %까지 끌어 올린 것인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정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은 통일시 세계 상위 15번째 산업국이었고 동구권에서 최고의 생활 수준을 가진 국가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통일의 여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10 년간에 걸쳐 1,0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금액은 10 년에 걸쳐 매년마다 약 100조 원 정도에 해당된다. 구서독의 조세 수입이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 비용 부담은 연간 예산의 약 1/5에 이른다. 2000년도 남한의 GNP당 예산 비율이 약 30%라면 총 정부 지출액은 2조 1,930억 달러에 달한다. 매년 약 1조 2,000억 달러씩 10년간 총 12조 420억 달러 정도 되는 통일 비용 산출액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의 50% 이상이 통일 비용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남한 예산의 50%가 통일 비용으로 할당되는 가운데 남북한 화폐 통합으로 인한 남한측의 부담액을 고려하여 교환 비율을 결정해본다.

본 고에서 추정한 북한 통화량은 북한화로 123억 원에서 249억 원이며, 북한의 외채 규모는 97억 달러로 1995년 6월 8일 북한의 무역은행이 발표한 무역 환율로 환산하면 북한화 48.5억 원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화폐 통합시 남한 통화로 단일 화폐가 결정되어 남한 돈으로 북한돈을 바꾼다면 북한화 171.5억 원에서 297.5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무역 환율로 cross rate된 북한과 남한의 교환 비율이 1991년 기준으로 북한화 : 남한화 = 1 : 341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남북한 화폐 통합시 남한 정부가 북한 통화 171.5억~297.5억 원을 바꾸어준다면 남한화 58,481.5억~101,447.5억 원이 될 것이다.

이 금액은 국내 기관 또는 학자들이 추정한 통일 비용의 중간 수준인 500조 원의 약 1/20로서 실제 구 동서독의 경우에도 화폐 통합 비용(1,000억 마르크)이 통일 비용(2조 마르크)의 1/20 정도였다.

실제로 구 동서독의 경우 경제·화폐 통합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나중에 큰 어려움없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남북한 화폐 통합시 무역 환율로 교환 비율을 결정해도 구 동서독이 통일될 당시 구서독의 1인당 GNP의 1/2 수준인 남한 경제력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11) 황의각,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과 통일 비용", 「통일문제연구」, 13·7집, 배재대학교, 1992, pp. 64~66.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환 비율

○ 임금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교환 비율

임금 평가식인 $E = \frac{W^S}{W^N}$ 를 계산할 때 1986년과 1990년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1986년의 경우, 북한의 계층별 임금은 중노동자를 기준으로 북한화 130 원이었고, 남한의 직종별 임금 평균은 남한화 345.242 원이었다. 북한의 중노동자 임금이 북한의 직종별 임금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1986년 임금 교환 비율은 $E = \frac{W^S}{W^N} = \frac{\text{남한화 } 345.242 \text{ 원}}{\text{북한화 } 130 \text{ 원}} = 2,655.708$ 이다.

1990년의 경우 $E = \frac{W^S}{W^N} = \frac{\text{남한화 } 430,000 \text{ 원}}{\text{북한화 } 130 \text{ 원}} = 3,307.692$ 이다

즉, 1990년 임금 교환 비율은 북한화 1원당 남한화 3,307.692 원이다.

○ 적용 가능성

교환 비율을 결정할 때 정책의 목표가 경제력이 약한 북한의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데 있다면 노동 임금은 남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임금 교환 비율이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55.708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북한의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노동자 가운데 숙련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정책 목표가 남북한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면 남북한 경제·화폐 통합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대부분 파산하게 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 남한 정부도 북한 기업의 도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실업 수당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구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독일 정부는 실업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경제에 대해 투자 보조금과 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왔다.

그러므로 화폐 통합이 어떤 교환 비율로 결정되든지 두 가지 대안 모두 심각한 정책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어, 경제 논리에 입각한 낮은 교환 비율과 소득 균등화 및 이주 억제 등을 위한 높은 교환 비율간의 선택이 정치적인 의사 결정 사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물론, 노동 인력의 이주가 반드시 남북한간의 임금 격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집세 및 생계비의 차이, 고향과 가족 친구들에 대한 애착과 타지 이주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의 이주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55.708 원보다 높은 임금에서 시작하든, 이보다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더 많이 임금 인상을 해야 하든 임금 상승의 압력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같아지므로 임금 교환 비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지리적 특성(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¹²⁾ 남북한 경제 통합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노동 생산성에 관계없이 남한과의 임금 균형을 목표로 함으로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55,708 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교환 비율이 결정되면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화폐 통합 후의 임금 조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55,708 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남북한 화폐 통합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임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연금은 보다 낮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남북한 화폐 통합 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나가고, 화폐 통합 후 임금 인상의 속도를 생산성 및 능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절충적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화폐 통합시 빠른 임금 인상 속도는 기업의 도산뿐만 아니라 대량의 실업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로 인한 고급 인력의 남한 이주를 막기 위해 임금 균형화 이외에 북한에 잔류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

하고 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금 보조금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고의 주된 의도가 유량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과 저장 개념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극소화하는 교환 비율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환 비율 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남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 결정 모형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과 단위 비용 평가 환율을 임금 평가 교환 비율,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또한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분석 방법은 모두 자본주의 경제학의 분석 논리를 이용한 교환 비율 결정 방법으로서, 이질 체제인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편협된 시각일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교환 비율 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남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고 북한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환 비율의 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면 적정 교환 비율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래 화폐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

12) 주독대사관, 「동서독 화폐 통합」, 1993. 11.

준으로 한 적정 교환 비율의 산정이 남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북한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 전망에 입각해서 적정 교환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추정된 교환 비율의 산정 문제,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와 남한에서의 인플레이션 방지와 같은 정책 목표에 각종 방법을 통해 추정된 교환 비율을 적용시켰을 때, 예상되는 효과의 비교 우위성 분석을 통하여 각 모형의 정책적 함축성과 현실 적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와 남한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교환 비율을 결정한다.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교환 비율은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로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이다. 만약 하방 경직성을 갖는 임금에 대한 교환 비율이 노동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의 임금 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그 결과 대량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화폐 교환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력의 정도는 화폐 통합 후 남한 원화로 표시되는 북한의 실제 통화량이 북한에서 남한 수준의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북한의 적정 화폐량을 어느 정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좌우되므로, 남한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은 남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환 비율로서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77 원이다.

첫째,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395.767 원이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교환 비율은 북한 주민의 실질 구매력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환 비율이다. 남 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을 적정 교환 비율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면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 수준은 낮아지고 실질 구매력이 저하된다. 만약, 이 모형을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교환 비율로 채택한다면,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보다 낮은 교환 비율이므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국영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도산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의 교환 비율은 남한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77 원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이 교환 비율을 채택한다면 남북한 화폐 통합시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인당 GNP의 1/10 수준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낮은 교환 비율로 교환 비율이 결정되어 북한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 수준이 떨어지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남한 이동을 억제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의 실질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교환 비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665.865 원,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 원이다. 이 모형은 북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교환 비율이다. 이 모형을 현실에 적용시켰을 때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남한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77 원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남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남북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면 남한은 통합에 따른 수요 증대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경제·화폐 통합에 따른 국영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도산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 것이며, 남한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발생할 것이며, 이런 기업에 도산과 실업이 집중될 것이다. 과잉 고용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고용 구조로 볼 때 통합 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평균 생산성 이하로 임금 수준을 통제해주는 교환 비율이 바람직하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북한 지역 노사간의 임금 협상이 보다 원활해지며, 그동안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의 획일적 임금체계였던 북한의 임금 구조에 부문별 생산성 차이를 감안한 차별적 임금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 교환 비율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주어진 임금 수준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급속히 상승한다면 경쟁력의 유지라는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화폐 교환 비율은 실질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임금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셋째,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496.089 원이다. 이 교환 비율을 남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로 채택한다면,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보다 낮은 교환 비율이므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국영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도산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37 원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남한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을 채택한다면 수출입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면 급작스럽게 해외 시장이 개방될 것이고,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그나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역도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 교환 비율 이상으로 교환 비율이 결정되면 북한 재화의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그에 따라 국제 교역은 더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입 경쟁력을 반영하는 교환 비율은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모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외적인 요인을 고려한 교환 비율로서 남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환 비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77 원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화폐를 교환해주면 북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며, 남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므로 남북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환 비율을 결정할 때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용 및 생산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인건비의 상승 압력은 없어서 북한의 고용은 증진되나 북한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 수준이 저하되어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남한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환 비율은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55.708 원이다.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이 교환 비율로 화폐를 교환하면 적합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임금 균형을 위해서 이 교환 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환 비율을 이용해 화폐를 교환해주면 북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대부분 파산하게 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 남한 정부도 북한 기업의 도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예로 실업 수당)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교환 비율로 책정될 경우, 1994년 현재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1/20, 199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남한의 15.5% 정도로서, 화폐 통합시 화폐의 실질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화폐를 교환함으로써 일시에 북한 경제가 실제보다 평가 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금이 일시에 상승함으로써 생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며 가격 자유화로 인한 국가 보조금 폐지가 물가 인상과 연결되어 제품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이 교환 비율로 결정될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적 소득을 가진 소비자들의 수요가 남한 제품에 집중됨으로써, 북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북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다시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의 감소는 실업자 발생을 더욱 조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범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도식

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경제력 격차가 심한 두 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실질 소득의 보상과 경쟁력의 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화폐의 교환 비율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경제력 수준이 낮은 북한은 교역재의 비중이 낮고 구매력 평가 환율과 경쟁력 수준을 반영하는 환율이 일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 통합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화폐의 교환 비율을 책정한다면 주민의 실질 소득이 떨어질 것이고, 주민의 실질 소득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화폐의 교환 비율을 책정한다면 경쟁력의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수출입 물가지수를 이용한 구매력 평가 환율이 남북한 화폐 통합시 교환 비율로 채택되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적정 교환 비율은 임금 상승으로 북한 기업의 도산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실질 구매력의 감소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화폐 통합으로 북한의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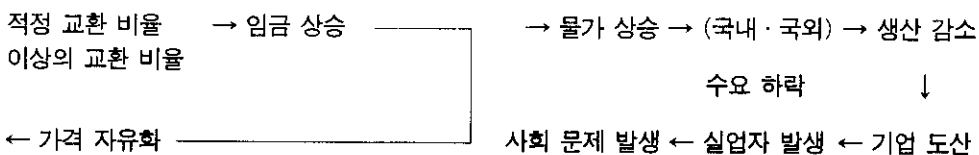
이 증가하여 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수출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형은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었을 때 민족의 화합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65.708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개방화 정책으로 급성장하여 남한의 경제력 수준이 되면 Lucas의 이국 모형에 의한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92,728 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Lucas의 이국 모형은 두 나라의 경제력 수준이 똑같다고 가정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어 남북한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북한의 고용과 생산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교환 비율 - 노동의 평균 생산성 또는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 - 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간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임금 수준을 급속

<그림>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을 고려한 교환 비율일 때 발생 현상



히 인상시킴으로써, 북한으로의 재정 이전이 현대적인 자본재 구축보다는 소비성으로 지출되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의 재건 및 구조 개편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화폐 통합시 바람직한 교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화폐 통합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북한 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국고 부담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을 설정할 때 유량(flow)과 저장량(stock)을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남북한 화폐 통합시에 유량 변수인 임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65.708 원이 적당할 것이다. 반면, 예금, 부채와 같은 저장 변수는 보다 낮은 교환 비율을 적용하여 화폐 통합을 한 후 점차적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한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267.430~541.337 원이 적당할 것이다.

둘째, 화폐 통합 방식이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합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조기 통합이나에 따라 교환 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의 경우는 구조 적응에의 압력이 완화되고, 북한 제품에 유리하게 구매

력이 발전되며 환율을 통해 북한내 가격 구조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고 점진적인 적응 과정으로 대량의 실업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무역 환율로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무역 환율이 지금은 왜곡되어 있지만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의 무역 환율이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즉각적인 화폐 통합의 경우는 가격 개혁 등이 즉각적으로 단행되고 준비 과정없이 세계 시장과 경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와해를 불러 일으키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동의 평균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을 이용한 단위 비용 평가 환율인 북한화 1 원 : 남한화 513.862~665.865 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